

# 현안과 과제

-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해야
  -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계층하락 심해



## Executive Summary

### □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해야

#### ■ 계층상승 사다리의 중요성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휘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 계층이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층변화)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20.8%에 달해 계층이 상승했다는 응답 2.3%보다 9배 이상 많았다. 계층 하락 이유로는 생활비부담 증가(39.8%), 소득감소(29.4%), 자산가격 하락(17.5%), 과도한 부채(9.5%), 기회 불공평(3.8%) 순이었다.

(계층상승 가능성) 응답자의 75.2%는 개개인이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답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는 생활비부담 증가(35.7%), 기회 불공평(28.2%), 소득감소(17.8%), 과도한 부채(10.7%), 자산가격 하락(7.6%) 순이었다.

#### ■ 계층이동에 대한 국민인식의 주요 특징

(성·가구주여부) 성별보다는 가구주 여부가 계층의식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여성 가구주는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한 경우가 31.7%에 이르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81.7%에 달했다.

(연령) 고령층은 지난 1년간 40.6%가 계층하락을 경험하였으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반면 30대는 계층하락 경험(15.3%)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80.2%에 달했다.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수록 한국사회의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종사자는 87.3%, 비정규직은 80.8%에 달하였다.

(가계수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는 지난 1년간 31.1%가 계층하락을 경험하였으며,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

(노후준비) 노후준비가 부족한 응답자의 경우 지난 1년간 26.5%가 계층하락을 경험하였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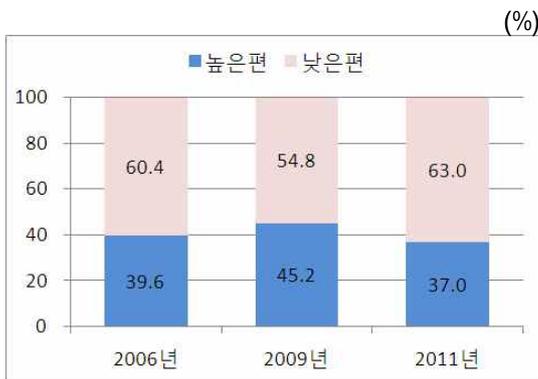
#### ■ 시사점

중산층 70% 재건을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생계부담 요인을 완화함으로써 가계수지 개선을 뒷받침해야 한다. 노후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여성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계층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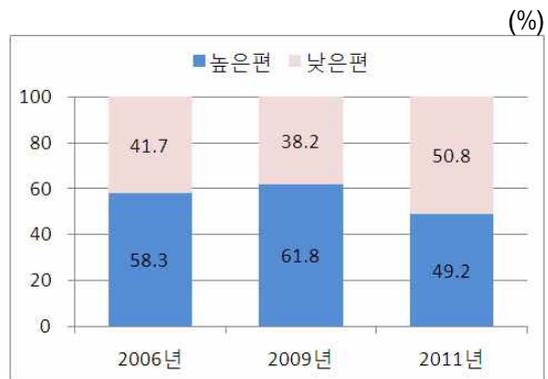
## 1. 계층상승 사다리의 중요성

-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일수록 중산층이 두텁고 중산층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나, 최근 계층상승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되고 있음
  -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휘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짐
    -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서, 중산층이 두텁고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해야 사회갈등도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
  - 통계청에 따르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음
    - “우리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2009년 45.2%에서 37.0%로 감소
    - “우리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2009년 61.8%에서 2011년 49.2%로 감소
  -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며, 유선전화 설문으로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08%p임
    - 응답자 특성은 <별첨1> 참조

< 본인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



< 다음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주 :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비율 산출 (무응답률은 약 10~2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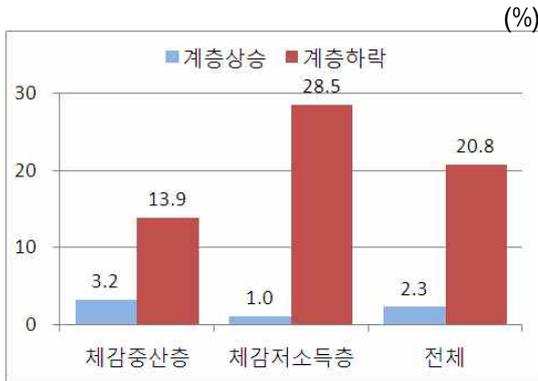
## 2. 계층이동에 대한 국민인식의 특징

### (1) 계층이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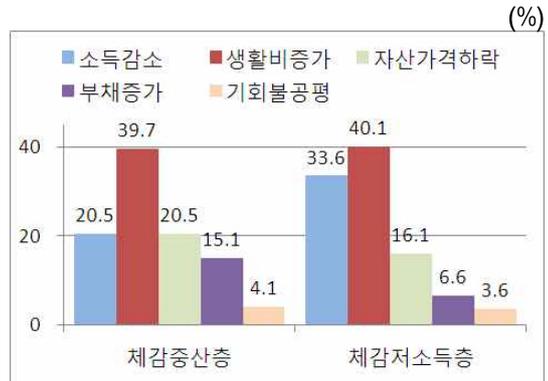
- (계층의식) OECD기준 계층에 비해 국민의 계층의식은 부정적<sup>1)</sup>
  -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심각
    - “귀댁은 현재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중산층이라고 답한 체감중산층이 51.8%. 체감저소득층은 47.4%, 체감고소득층은 0.8%
    - 반면 OECD기준으로는 응답자의 61.9%가 중산층이고, 고소득층은 30.8%, 저소득층은 7.3%
- (계층변화)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상승했다는 응답의 9.2배에 달할 만큼, 국민들은 계층 추락이 심각하다고 생각
  - 계층변화 : 체감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계층 하락이 심각한 수준
    - “지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귀댁의 계층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0.8%가 하락했다고 응답한 반면, 상승했다는 응답은 2.3%에 불과. 한편 76.9%는 계층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
    - 특히 체감저소득층의 경우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28.5%에 달해 체감중산층의 13.9%를 크게 상회
  - 계층하락 이유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활비부담 증가(39.8%), 경기 둔화로 인한 실직이나 소득 감소(29.4%), 자산 가격 하락(17.5%), 과도한 부채로 인한 상환부담 증가(9.5%), 기회 불공평(3.8%) 순임
    - 체감중산층과 체감저소득층 모두 생활비부담 증가가 계층 하락의 주된 요인
    - 체감중산층의 경우 자산 가격 하락(20.5%)과 과도한 부채(15.1%) 응답률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체감저소득층은 소득감소(33.6%)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1)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현대경제연구원, 2013.8.26) 참조

< 지난 1년간 계층 변화 >



< 계층 하락 이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계층상승 가능성) 4명 중 3명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만큼 한국사회의 계층이동성에 대해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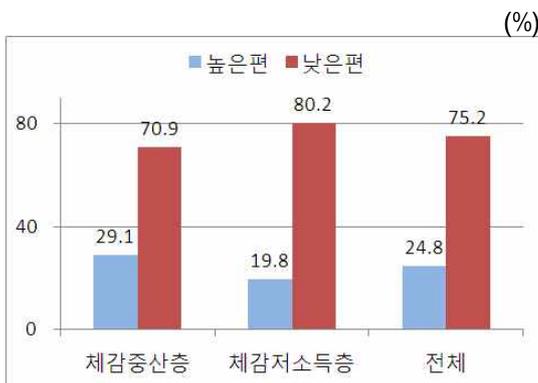
- 계층상승 가능성 :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체감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팽배

-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5.2%는 낮은 편, 24.8%는 높은 편이라 응답
- 특히 체감저소득층의 경우,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80.2%에 달해 체감중산층의 70.9%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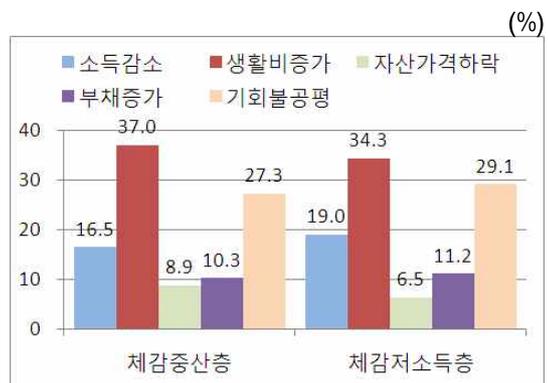
-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이유 :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 증가(35.7%), 기회 불공평(28.2%)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

- 한편 소득감소(17.8%), 과도한 부채(10.7%), 자산가격 하락(7.6%)이 뒤를 이음

< 계층상승 가능성 >



< 계층상승 가능성 낮은 이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 계층이동에 대한 국민인식의 특징

- (성·가구주여부) 성별보다는 가구주 여부가 계층의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며, 특히 여성 가구주의 계층의식이 부정적
  - 여성 가구주 : 전체평균보다 체감저소득층 비중이 높고, 지난 1년간 계층이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
    - 체감중산층은 34.1%에 불과한 반면 체감저소득층은 64.6%에 달함
    -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31.7%에 달해 평균 20.8%를 크게 상회하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81.7%에 달함
    - 여성 가구주의 계층의식이 비관적인 이유는 한부모 가정일 가능성이 높고, 가구의 월가처분소득이 299만원으로 전체평균 432만원보다 적으며, 자산 또한 2.4억원으로 전체평균 4.1억원보다 적기 때문
  - 여성 비가구주 : 전체평균보다 체감중산층 비중이 높고, 지난 1년간 계층하락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력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인식
    - 체감중산층이 59.1%로 전체평균보다 많고, 체감저소득층은 40.0%로 적은 편
    - 본인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주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층의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가구의 월가처분소득 489만원, 자산 4.7억원으로 전체평균보다 많음)
  - 한편 남성의 경우, 가구주든 비가구주든 계층의식이 전체평균과 비슷

### < 성·가구주여부별 체감계층, 계층변화, 계층상승가능성 >

(%)

	체감계층		계층이동		계층상승 가능성	
	중산층	저소득층	계층상승	계층하락	높은편	낮은편
전체	51.8	47.4	2.3	20.8	24.8	75.2
남-가구주	48.5	50.7	2.7	25.3	28.0	72.0
남-비가구주	50.0	50.0	2.2	12.3	26.1	73.9
여-가구주	34.1	64.6	2.4	31.7	18.3	81.7
여-비가구주	59.1	40.0	1.9	17.5	23.0	77.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1 :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존재함을 뜻함(이하 동일)

주2 : 체감 고소득층은 0.8%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 (이하 동일)

주3 : 계층이동이 없다고 응답한 76.9%는 분석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이하 동일)

- (연령) 고령층은 체감저소득층 비중이 높고 계층하락이 심하나, 노력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반면 30대는 계층하락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
- 29세 이하 청년층 : 체감중산층 비중이 높고 계층하락 비중이 낮은 편이며, 계층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인식할 만큼 계층의식이 매우 긍정적
  - 부모의 보호 덕분에 본인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드물고(217명 중 25명만 가구주), 좋은 직장을 얻어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가구의 월가처분소득 482만원, 자산 3.8억원)
- 30대 :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한 비중은 12.0%로 낮은 편이나,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응답이 80.2%에 달할 만큼 계층의식이 비관적
  -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식료품비와 주거비 부담이 크고, 교육보육비 부담도 점점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34.4%로 전체평균 25.6%보다 많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응답도 25.6%로 전체평균 20.1%를 상회
  - 1997년 외환위기 및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이자 2008년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하우스푸어로 추락한 경우가 많은 세대로서, 소득 및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층상승 가능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가구의 월가처분소득은 420만원으로 전체평균 433만원과 비슷하나, 자산은 2.7억원으로 전체평균 4.1억원보다 적음

< 연령별 체감계층, 계층변화, 계층상승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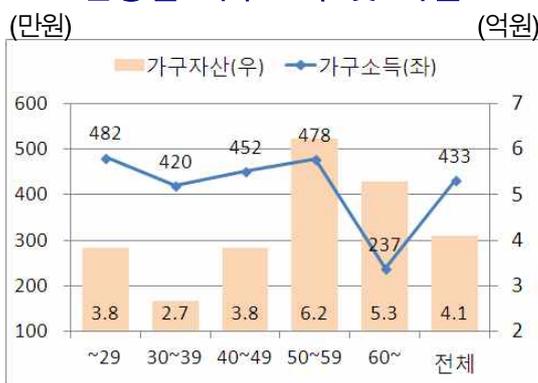
(%)

	체감계층		계층이동		계층상승 가능성	
	중산층	저소득층	계층상승	계층하락	높은편	낮은편
전체	51.8	47.4	2.3	20.8	24.8	75.2
~29세	61.3	38.7	3.7	12.0	29.5	70.5
30~39세	53.1	46.6	1.5	15.3	19.8	80.2
40~49세	52.3	45.7	3.1	17.6	23.4	76.6
50~59세	50.8	48.0	1.1	33.0	23.5	76.5
60세~	28.7	70.3	1.0	40.6	33.7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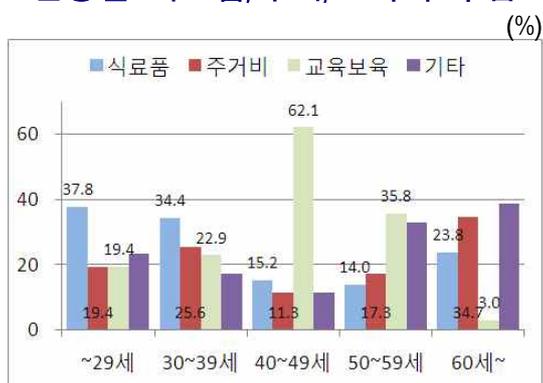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40대 : 체감중산층 및 체감저소득층 비중,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한 비중과 미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
  - 가구의 월가처분소득 452만원, 자산 3.8억원으로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
  - 다만 교육비 부담이 커서 계층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 소비지출 중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62.1%로 전체평균 32.3%를 크게 상회
- 50대 베이비붐세대 : 자산과 소득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했다고 인식
  -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33.0%로 전체평균 20.8%를 크게 상회.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평균과 비슷
  - 가구의 월가처분소득 478만원, 자산 6.2억원으로 전체평균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년퇴직에 대한 불안과 노후 불안으로 계층이 하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판단됨
  - 1980년대에 사회에 진출해 고도성장을 경험한 세대로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60세 이상 고령층 : 체감저소득층 비중이 높고 계층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나, 개개인이 노력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 체감저소득층이 70.3%에 달해 전체평균 47.4%보다 훨씬 많고,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도 40.6%로 전체평균 20.8%를 크게 상회. 소득이 급감하는 가운데 노후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개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33.7%로 전체평균 24.8%를 상회. 고도성장을 경험한 세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 가구소득 및 자산 >



<연령별 식료품/주거/교육비 부담>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주 : 가구소득은 월가처분소득을 뜻함

- (일자리 질) 본인과 가구주의 일자리가 질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긍정적인 반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수록 계층의식이 부정적
  - 본인이 정규직인 응답자의 계층의식이 긍정적인 가운데, 자영업자는 지난 1년간 계층하락이 심했으며, 비정규직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 정규직 : 체감중산층 비중이 61.0%로 높은 편이고 계층하락 비중도 14.9%로 낮은 편임. 계층상승 가능성은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
    - 비정규직 : 체감저소득층 비중이 72.8%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응답이 80.8%에 달해 계층의식이 매우 부정적
    -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즉 정규직 시장과 비정규직 시장이 분단되어 있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
    - 자영업자 :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한 경우가 27.2%로 전체평균보다 많은 편이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평균과 비슷
  - 가구주의 소득이 높고 고용이 안정될수록 계층의식이 긍정적
    - 가구주의 소득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경우, 체감중산층이 84.8%에 달하고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도 9.0%로 매우 낮음. 계층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인식
    - 반면 가구주의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 체감중산층이 17.3%에 불과하고 계층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33.6%에 달함. 또한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87.3%에 달함

< 일자리의 질 · 직업별 체감계층, 계층변화, 계층상승가능성 >

(%)

	체감계층		계층이동		계층상승 가능성	
	중산층	저소득층	계층상승	계층하락	높은편	낮은편
전체	51.8	47.4	2.3	20.8	24.8	75.2
정규직	61.0	38.2	2.8	14.9	23.7	76.3
비정규직	26.4	72.8	2.4	23.2	19.2	80.8
자영업자	50.7	48.7	1.7	27.2	25.8	74.2
고소득+안정	84.8	13.0	4.0	9.0	30.9	69.1
고소득+불안	69.7	28.9	3.5	20.4	26.1	73.9
저소득+안정	48.2	51.8	1.8	18.7	24.6	75.4
저소득+불안	17.3	82.7	0.9	33.6	12.7	87.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가계수지) 흑자가구일수록 계층의식이 긍정적이고 적자가구일수록 부정적

-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흑자가구의 경우,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한 경우는 12.7%로 적은 편이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
  - 체감중산층이 69.7%로 매우 많고, 체감저소득층은 28.8%임
- 반면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가구의 경우,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한 경우는 31.1%로 많은 편이고,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 체감중산층은 27.9%에 불과하고, 체감저소득층이 69.7%에 달함

< 가구수지별 체감계층, 계층변화, 계층상승가능성 (%) >

	체감계층		계층이동		계층상승 가능성	
	중산층	저소득층	계층상승	계층하락	높은편	낮은편
전체	51.8	47.4	2.3	20.8	24.8	75.2
적자가구	27.9	71.3	1.6	31.1	19.7	80.3
흑자가구	69.7	28.8	3.3	12.7	30.0	70.0
균형가구	51.6	48.2	1.8	21.0	24.0	76.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노후준비)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계층의식이 긍정적

-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한 경우는 13.3%로 적은 편이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
  - 체감중산층이 73.8%로 매우 많고, 체감저소득층은 24.7%임
- 반면 노후준비가 잘 안된 경우, 지난 1년간 계층이 하락한 경우는 33.9%로 많은 편이고,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 체감중산층은 34.9%에 불과하고, 체감저소득층이 64.9%에 달함

< 노후준비 정도별 체감계층, 계층변화, 계층상승가능성 (%) >

	체감계층		계층이동		계층상승 가능성	
	중산층	저소득층	계층상승	계층하락	높은편	낮은편
전체	51.8	47.4	2.3	20.8	24.8	75.2
잘된 편	73.8	24.7	3.4	13.3	33.9	66.1
못된 편	34.9	64.9	1.4	26.5	17.8	82.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3. 시사점

- 중산층 70% 재건을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 첫째,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수록 계층의식이 취약한 만큼,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화를 극복하고 일자리의 질 개선을 통해 계층상승 가능성 제고
    - 일자리의 질이 낮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나 자영업자보다 계층상승 가능성  
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  
아지고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
  - 둘째, 적자가구일수록 계층의식이 취약한 만큼, 생애주기별로 생계부담 요  
인을 완화함으로써 가계수지 개선을 뒷받침
    - 30대 : 임대주택 확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을 통해 신생 가구의 주거  
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40~50대 :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 60대 :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부담 완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셋째,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무주택자일수록 계층의식이 취약한 만큼, 노후  
준비 및 자산 형성 지원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을 강화  
하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인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노력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넷째, 여성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의식 개선
    -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  
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 사회보호제도 강화
    - 특히 취약가구의 자녀들의 계층상승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  
및 생활지원 강화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별첨>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1,015명	100%	소득 수준별	200만원대 이하	24.0
성별	남성	50.7		300만원대	21.6
	여성	49.3		400만원대	16.2
연령별	20대 이하	21.4		500만원대	14.9
	30대	25.8		600만원대 이상	22.7
	40대	25.2	자산규모별	1억 미만	12.4
	50대	17.6		1~3억미만	36.7
60대 이상	10.0	3~5억미만		19.4	
가구주 여부별	가구주	45.1		5~10억미만	17.7
	非가구주	54.9	10억이상	10.1	
가구주 직업별	정규직	52.3	지역별	서울	20.9
	비정규직	12.3		인천/경기	27.4
	자영업자	29.4		대전/충청/강원	13.2
	기타	6.0		광주/전라/제주	11.7
가계수지	흑자가구	32.6		부산/울산/경남	16.2
	적자가구	24.1		대구/경북	10.6
	균형가구	43.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